

2021
2. 8

KRIHS POLICY BRIEF
No. 802

발행처 국토연구원
발행인 강현수
www.krihs.re.kr



국토정책

Brief
KRIHS POLICY BRIEF

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



요약

- ① 수도권-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지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전환됨
- ② 핵심생산인구(25~49세) 및 15~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는 경기도 남부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 등에서 높게 나타남
- ③ 고령인구(65세 이상)의 인구이동지수는 지방의 군(郡)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,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구(區)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
- ④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, '주택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, '직업'상의 이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증가함
- ⑤ '직업' 및 '교육'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에서 나타났고, '주택'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주변의 경기도 시(市) 지역에서, 순유출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

정책적 시사점

- ①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
- ② 인구이동 현황을 지역 현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, 인구이동 정도에 따라 인구이동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
- ③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목표로서 계획인구 지표 외에 도시 현황 모니터링 지표로 인구이동 지표를 추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
- ④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구이동에 대한 사전 정책대응 강화 필요

민성희 연구위원
배인성 전문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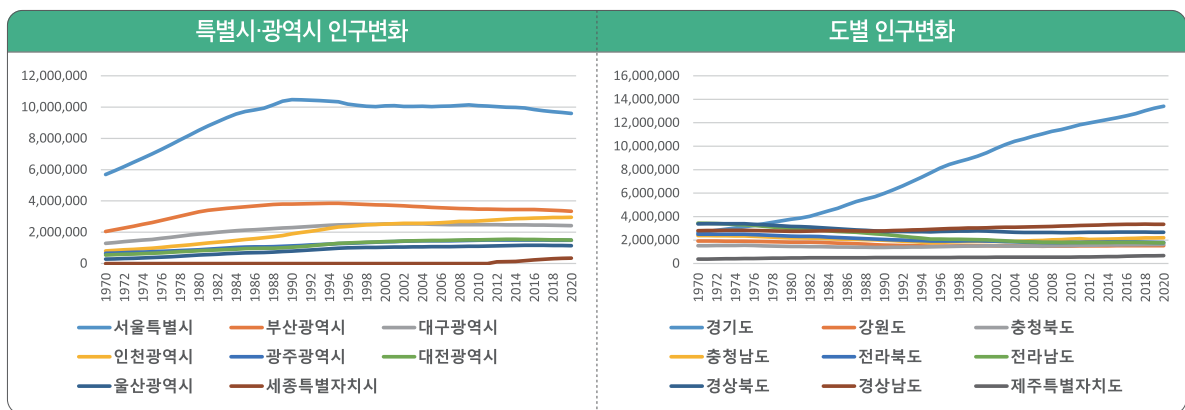
1

지역별 인구변화 및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

지역별 인구변화

특별시·광역시 인구는 199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, 경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,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

그림 1 시도별 인구변화(1970~2020년)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14 (원자료는 통계청, 2019. 장래인구추계(2017년 기준) <<https://kosis.kr/index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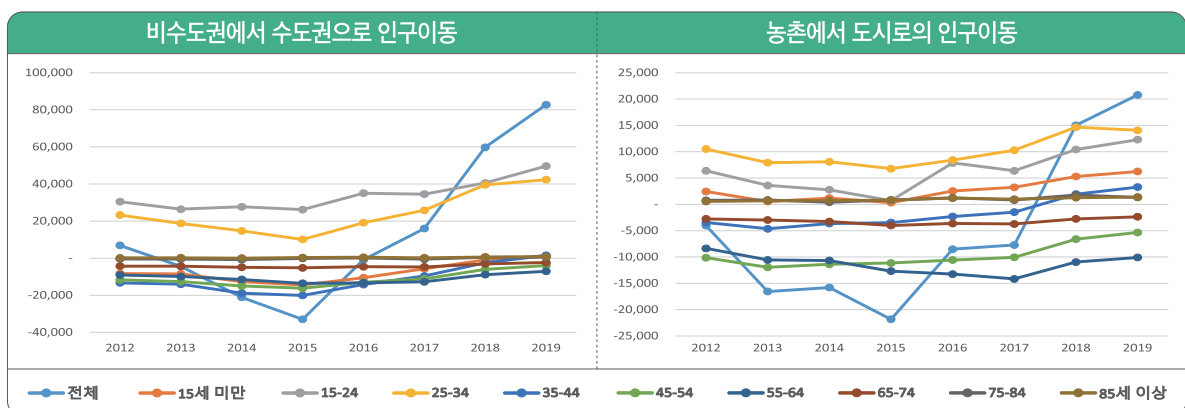
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

수도권-비수도권 간 인구

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지다 2017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전환

- 15세 미만과 35~84세까지는 대체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많았으나, 15~34세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높게 나타남

그림 2 지역 간 인구이동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18-19 (원자료는 통계청, 각 연도. 국내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).

도시-농촌 간 인구이동

2012~2017년까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순이동이 높게, 2018년부터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이동이 높게 나타남

- 35세 미만과 75세 이상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이동, 35~74세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순이동이 높게 나타남

시·도 간 인구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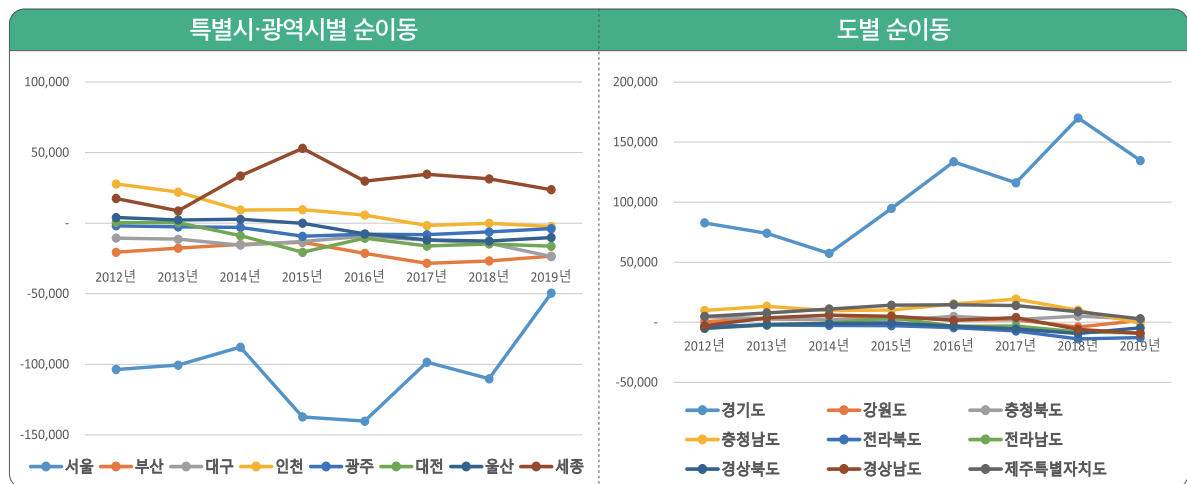
(특별시·광역시) 서울특별시·부산광역시·대구광역시·광주광역시는 2012년 이후 순유출이 나타남

- 인천광역시·대전광역시·울산광역시는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됐고,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(도) 경기도·강원도·충청북도·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순유입이 나타난 반면, 전라북도·전라남도·경상북도·경상남도는 지속적인 순유출이 일어남

- 충청남도는 2018년까지 순유입이 나타나다 2019년에 순유출로 전환됐고, 경상남도는 2012년 순유출에서 2013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가 2018년에 다시 순유출로 바뀜

그림 3 시도별 인구이동(2012~2019년)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22 (원자료는 통계청, 각 연도, 국내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).

인구이동의 강도(이동량)와 방향성(순유입·순유출)을 나타낼 수 있는 인구이동지수 분석

지역에서 해당 연령이 차지하는 순이동의 비율에 지역의 해당 연령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해당 연령의 순이동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 설정

- 인구이동지수 값이 양(+)일 경우 해당 연령은 지역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, 음(-)일 경우는 해당 연령으로 인하여 지역의 순유출이 발생하게 됨
- 인구이동지수 값이 클수록 해당 연령이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
- 따라서 인구이동지수 값이 양(+)쪽으로 클수록 해당 연령이 지역의 순유입에 기여하는 정도가 강하고, 음(-)의 값이 클수록 해당 연령으로 인하여 지역의 순유출이 나타나게 하는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음

$$MigIndex_{age} = \frac{NM_{i,age_j}}{NM_{i,age}} \times \frac{Mig_{i,age_j}}{Mig_{age}}$$

여기서, $NM_{i,age}$ 는 i지역의 전연령의 순이동량

NM_{i,age_j} 는 i지역의 j연령의 순이동량

Mig_{age_j} 는 전국의 j연령의 인구이동량

Mig_{i,age_j} 는 i지역의 j연령의 인구이동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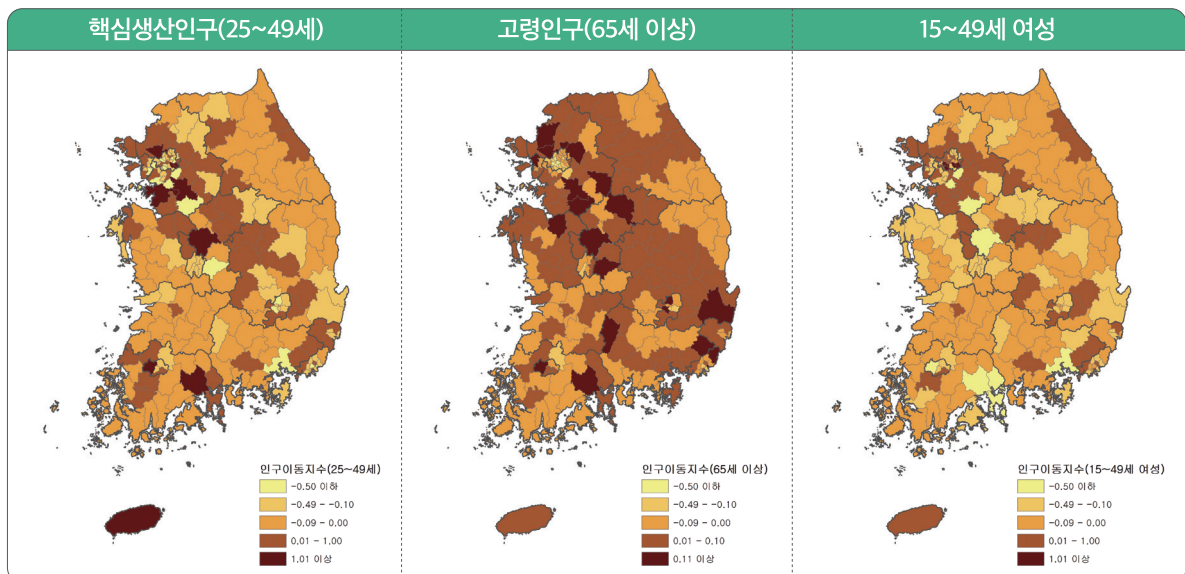
핵심생산인구(25~49세)의 인구이동지수는 경기도 남부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 등에서 높게 나타남

- 전체 228개 시·군·구 중 약 30%인 71개 시·군·구에서만 인구이동지수가 양(+)을 나타내고, 157개 시·군·구에서는 음(-)의 값을 보여줌
- 핵심생산인구의 인구이동지수가 1 이상인 시·군·구는 순천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, 청주시, 서울특별시 송파구, 화성시, 용인시, 고양시, 제주시로 나타남
- 반면, 서울특별시 관악구·동작구, 수원시, 안성시는 인구이동지수가 -1 이상인 시·군·구로 나타남

고령인구(65세 이상)의 인구이동지수는 지방의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,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구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

- 고령인구의 인구이동지수는 수도권과 경부축에서 양(+)의 값을 보여줌
- 전체 228개 시·군·구 중 약 51%인 116개 시·군·구의 인구이동지수가 양(+)을 나타내고, 112개 시·군·구에서는 음(-)의 값을 보여줌
- 안성시, 청주시, 순천시, 부산광역시 수영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양(+)의 값이 나타난 반면, 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대문구·동작구·영등포구·관악구·은평구·동대문구·마포구 등에서 음(-)의 값이 나타남

그림 4 인구이동지수 분석 결과(2019년)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43; 45-46 (원자료 통계청, 2019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).

15~49세 여성*의 인구이동지수가 높은 지역은 핵심생산인구의 인구이동지수가 높은 지역과 대체적으로 일치

* 15~49세 여성은 일반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여성의 가임기간으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임

- 15~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는 수도권외의 시·군·구에서 대부분 양(+)의 값을 보여줌
- 전체 228개 시·군·구 중 약 27%인 67개 시·군·구의 인구이동지수가 양(+)을 나타내고, 166개 시·군·구에서는 음(-)의 값을 보여줌
 - 15~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가 1 이상인 시·군·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동작구·관악구·송파구·강남구임
 - 서울특별시 구로구·마포구·중구·용산구,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 대도시의 구 지역에서 15~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가 양(+)의 값으로 나타남
 - 반면, 순천시·안성시·여수시는 15~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가 -1 이하로 나타났고, 청주시, 광주광역시 광산구·광양시 등도 인구이동지수가 음(-)의 값으로 나타남

2

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특성

2013~2019년까지의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, '주택'으로 인한 이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

- '주택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약 4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'가족', '직업', '교육' 순으로 나타남
- '직업'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증가한 반면, '주택' 사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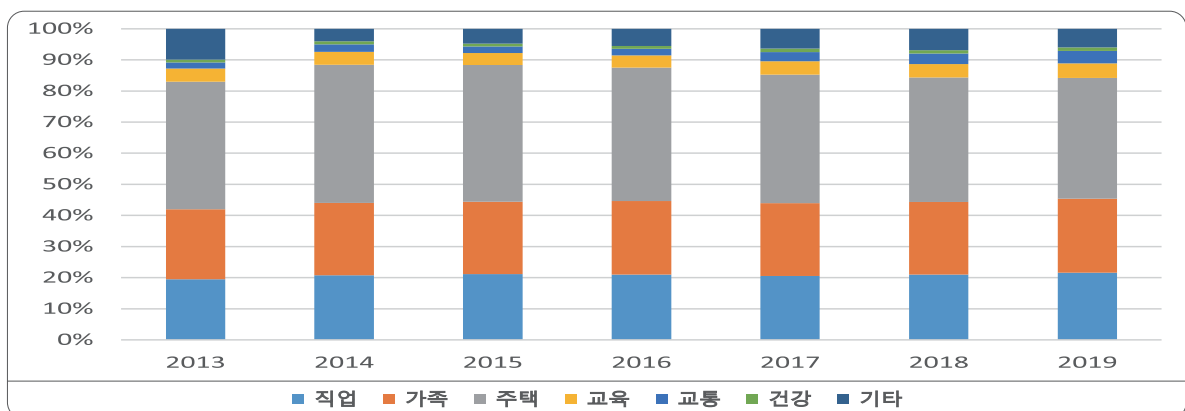
'직업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19.5%에서 2019년 21.6%로 증가함

- '주택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41.0%에서 2019년 38.8%로 감소함

'교육'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다른 이동사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

- 2013년 4.2% 및 2019년 4.3% 등 '교육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4%대를 유지함

그림 5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(2013~2019년)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51 (원자료 통계청, 2019. 국내 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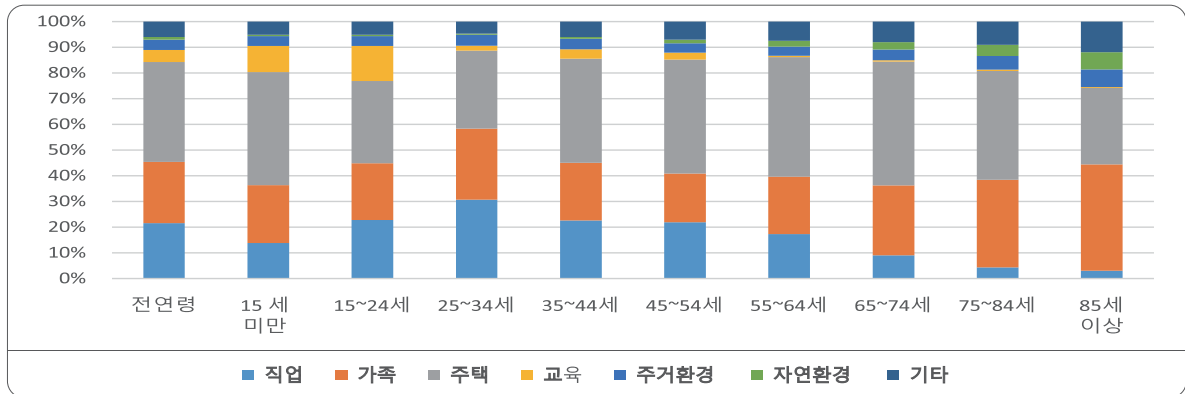
2019년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, '주택'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남

- '직업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21.6%, '가족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23.9%, '주택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38.9%, '교육'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4.7%로 나타남

연령별로 이동사유를 살펴보면, '직업'으로 인한 이동은 25~34세, '주택'으로 인한 이동은 55~64세, '교육'으로 인한 이동은 15~2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'직업'으로 인한 이동은 15~54세에서 25.3%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
- '주택'으로 인한 이동은 45~84세에서 45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교육'으로 인한 이동은 25세 미만에서 12.0%의 비율을 차지함

그림 6 연령별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(201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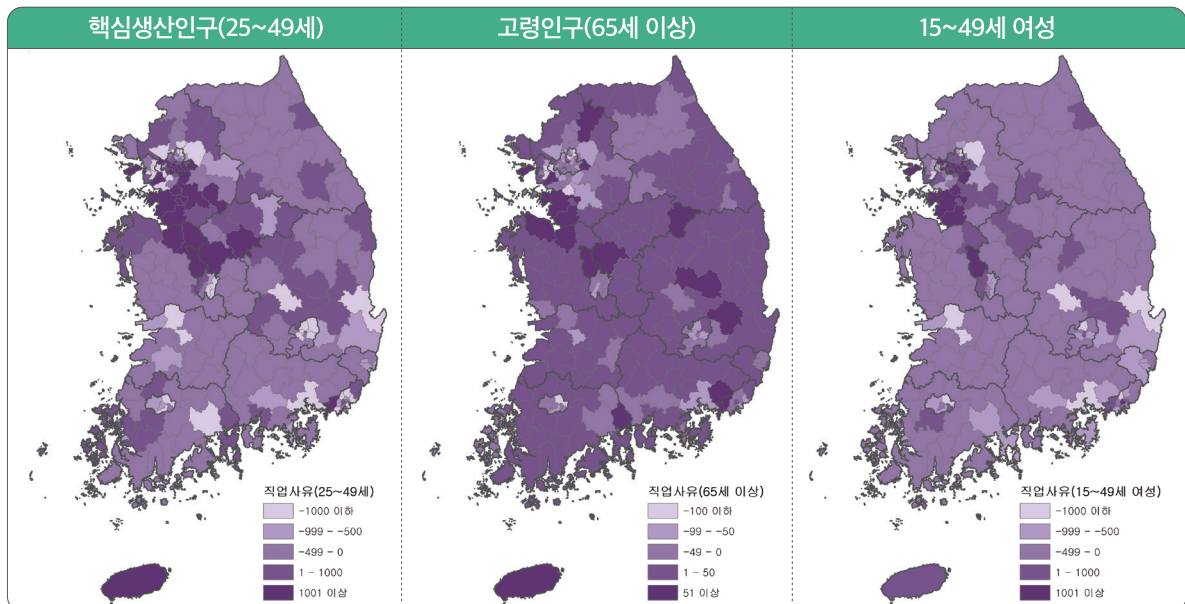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52 (원자료 통계청, 2019. 국내 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).

'직업'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경기도 및 충청도의 시·군에서도 '직업'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순이동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(2019년 기준)

- (핵심생산인구: 25~49세)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지역 중에서 약 33%인 76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입이 발생, 152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함
- (고령인구: 65세 이상) 평택시, 화성시, 인천광역시 중구, 서울특별시 중구,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높게 나타남
- (15~49세 여성)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지역 중에서 약 25%인 58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입이 발생, 170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함

그림 7 '직업'으로 인한 순이동 현황(201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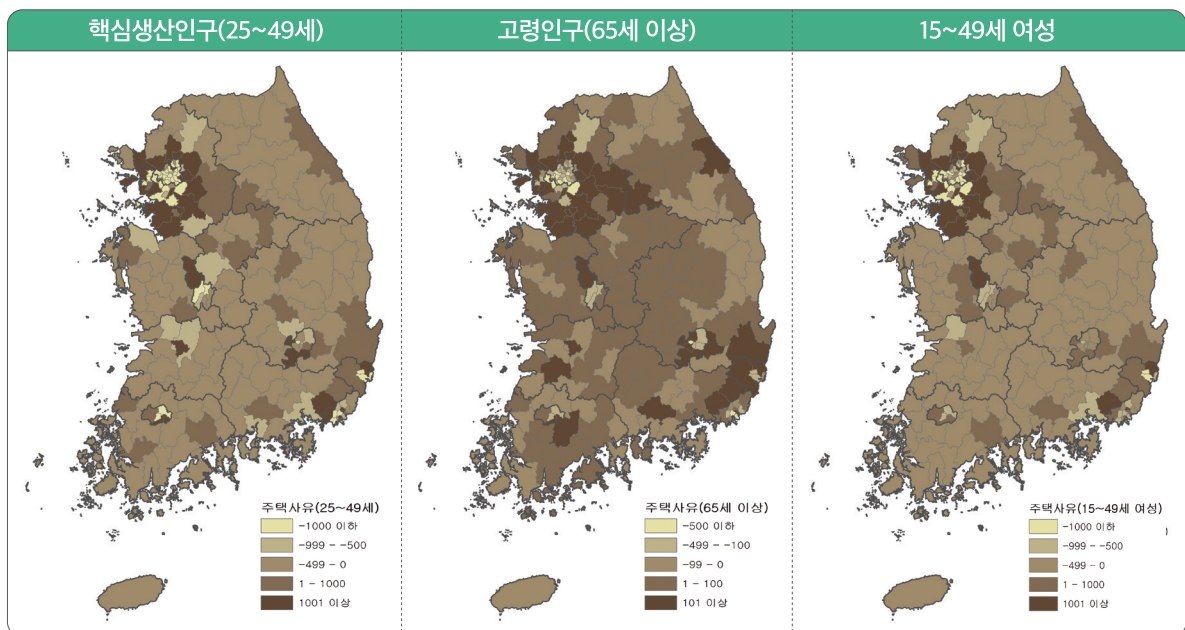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58; 62; 66 (원자료는 통계청, 2019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).

‘주택’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주변의 경기도 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, 서울특별시 내의 구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(2019년 기준)

- (핵심생산인구)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지역 중에서 약 26%인 60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입이 발생, 168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함
- (서울특별시 주변) 고양시·용인시·화성시·남양주시·시흥시,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에서 ‘주택’ 사유로 인한 순이동이 높게 나타남
- (15~49세 여성)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지역 중에서 약 25%인 56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입이 발생, 172개 시·군·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함

그림 8 ‘주택’으로 인한 순이동 현황(2019년)



출처: 민성희 외 2020, 60; 64; 68 (원자료 통계청 2019. 국내 인구이동통계 <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, 2020년 6월 22일 검색>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).

3

정책적 시사점

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

-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지역소멸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분석 결과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및 일자리를 연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(이상림 2014)
- 지역 간 인구이동 원인이 되는 주택·직업·교육 등에 관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 이후, 해당 요인을 고려한 인구이동촉진정책 및 지역대응정책 추진(최석현 외 2016)

인구이동 현황을 지역 현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, 인구이동 정도에 따라 인구이동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

-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도 해당 지역의 낙후도나 산업기반뿐만 아니라 인구이동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 추진 필요
- 인구 진출·입의 급격한 변동이 특정 기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이동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

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목표로서 계획인구 지표 외에 도시 현황 모니터링 지표로 인구이동 지표를 추가하고 대응 필요

- 계획인구는 대상 지역의 특정 목표 시기의 목표를 제시하는 정태적 지표로서, 중장기에 걸쳐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준거가 되지만, 특정 시기 인구이동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미비한 상황임
- 따라서 인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구 지표의 동태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인구이동지수 등 인구이동 지표를 추가하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

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구이동에 대한 사전 정책대응 강화 필요

- 인구이동은 개개인의 장래 기대수익 등을 토대로 한 개인의 선택적 행태로 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해당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불만족하는지 상시 소통체계를 확립해 사전 인지하고, 이에 대처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필요
- 지역 주민의 의견을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 수립 시에 집중해 수렴하기보다는 인터넷 혹은 리빙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상시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피드백체계를 구축할 필요

참고문헌

- 민성희·변필성·김선희·이순자·황명화·차은혜. 2017.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. 세종: 국토연구원.
 민성희. 2018. 지역의 인구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.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토론회 발표자료: 3-19. 8월 26일. 서울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·국가균형발전위원회.
 이상림. 2014. 시·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. 보건복지포럼 218호: 49-60.
 최석현·이병호·박정훈. 2016.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. 경기: 경기연구원.
 통계청. 2019. 장래인구추계. <https://kosis.kr/index/index.do> (2020년 6월 22일 검색).
 _____. 각 연도. 국내 인구이동통계. <https://mdis.kostat.go.kr/index.do> (2020년 6월 22일 검색).

※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“민성희·배인성. 2020.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. 세종: 국토연구원” 결과를 정리한 것임.

•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
(shmin@krihs.re.kr, 044-960-0154)

• 배인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
(isbae@krihs.re.kr, 044-960-0189)



KRIHS 국토연구원

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
전화 044-960-0114

홈페이지 www.krihs.re.kr
팩스 044-211-4760

